
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4항 본문 중 “제41조제1항”을 “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41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2항 중 “제41조”를 “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41조”로 한다.

제3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임원의 해임권고와 직무정지는 병과할 수 있다.

제39조제6항제4호 중 “직무정지의 요구”를 “직무정지”로 한다.

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9조의2(제재시효) ①제39조에 따른 임직원에게 대한 조치 및 제39조의3에 따른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(다수인이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)부터 5년(위반행위의 공소시효가 5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시효”라 한다)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.

②내부감사, 검찰·경찰 등의 수사, 행정심판, 소송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. 다만, 소송 이외의 사유로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을

넘지 못한다.

③행정심판 또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조치가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지에 따라 다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39조의3(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) ①금융위원회(제39조제6항제3호의 조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39조제6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
제46조제2항 중 “5천만원”을 “2억원”으로 한다.

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에게는”을 “자(제3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)에게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39조제3항(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40조제3항·제4항에 따른 검사, 자료제출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

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호”를 “제5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, 제3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

3.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

8.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

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8호까지, 제10호 및 제11호”를 “제8호까지 및 제10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2호 중 “자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”를 “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금융위원회”를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부과·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·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징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8조(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) ① ~ ③ (생략)	제28조(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3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, 제2장(제19조는 제외한다) 및 제3장(제21조제4항, 제21조의2, 제21조의3,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), 제37조, 제38조, 제39조제1항·제6항, 제41조제1항, 제43조제2항·제3항, 제46조,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소속 임직원의 위법·부당한 행위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5조, 제39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제2항·제3항을 준용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41조제1항</u>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29조(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)	제29조(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
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및 제 39조의3에 따른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(다수인이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)부터 5년(위반행위의 공소시효가 5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시효"라 한다)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.

②내부감사, 검찰·경찰 등의 수사, 행정심판, 소송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. 다만, 소송 이외의 사유로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.

③행정심판 또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조치가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지에 따라 다시 조치를 할 수

<신 설>

제46조(과징금) ① (생략)

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(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

있다.

제39조의3(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) ① 금융위원회(제39조제6항제3호의 조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39조제6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
제46조(과징금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③ ~ ⑤ (생략)

제5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제3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)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(생략)

<신설>

----- 2억원 -----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51조(과태료) ① -----
----- 자(제3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)에게는 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제39조제3항(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40조제3항·제4항에 따른 검사, 자료제출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

② -----

----- 제5호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

<신 설>

2. (생 략)

3. (생 략)

4. · 5. (생 략)

<신 설>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제1호, 제6호부터 제8호까지,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)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10. (생 략)

11. 제39조제3항(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40조제3항·제4항에 따른 검사, 자료제출 및 조사

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

3.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검직하게 하거나 검직한 자

4. (현행 제2호와 같음)

5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6. · 7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)

8.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

③ -----

제8호까지 및 제10호-----

-----.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p><u>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 피한 자</u></p> <p>12.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 계처리의 구분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</p> <p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는 <u>금융위원회</u>가 부과·징수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12. ----- ----- - <u>자</u></p> <p>④ ----- ----- <u>대통령령이</u> <u>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-</u> -----.</p> <p>⑤ <u>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</u> <u>까지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</u> <u>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부과</u> <u>·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</u> <u>우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이</u> <u>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</u> <u>· 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분기별</u> <u>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</u> <u>다.</u></p>
---	--